

#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표류하는 환경정책

**신정** 부 출범과 함께 정치, 사회 등 국내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사정, 개혁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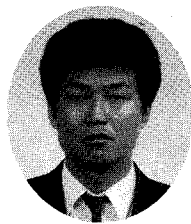
기존의 악습, 폐습들이 부분적으로 하나씩 둘씩 단죄의 도마위에 오르고 국민 개개인의 의식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정의의 실체를 다시 일으켜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내에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고정 관념과 의식을 서서히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인듯 하다.

그러나 정치, 사회분야쪽을 중심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정, 개혁바람이 경제분야쪽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경기회복 열기가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사정과 개혁의 물결에서 다소 떨어져있다는 사실에 논란을



南文鉉  
(서울경제 사회부기자)

제기하기 앞서 불황에 가까운 지난 몇년간의 상황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3저현상에 편승해 호황기를 누리던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를 고비로 내리막길을 걸어온 한국경제는 「거품해소다, 침체 상황이다」의 뜨거운 논쟁속에서 어느덧 불황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굳어왔다.

이것은 새정부에도 큰 짐이 된듯 경제회복을 위한 신경제 1백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이 마련돼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마무리되는 98년 국민 1인당 GNP는

1만4천5백달러 소비자물가는 3%대로 안정을 이루고 무역수지도 큰 흑자를 이루는 등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건설부문 등에 집중적인 지원, 투자를 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고취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경제계획속에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같이 환경이 당분간은 경제 우선정책에 불가피하게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케 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비록 현정부가 집권후반기 부터 환경쪽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 표명이 5개년 계획속에 포함돼 있지만 정책적 무게는 다른 내용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평이다.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여건속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을 주요정책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외의 환경산업시장의 성장전망과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환경대책 환경보호에 아직 안이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을 감안하면 환경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해 정부의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관련 산업시장은 약 9천억원에 이르렀고 오는 2,000년께는 5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제시장규모도 현재 3천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배가 늘어난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8천5백여개사(92년 기준)에 이르는 환경관련산업체들은 규모와 기술력에 있어 영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7백여개사에 이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계의 경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약 40%, 2억원 미만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요기술의 대부분은 외국에 의존, 기술도입건수가 일본 미국 등 모두 14개국서 1백 42건으로 이에 따른 기술 도입료만도 2백13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외국업체의 진출이 지난해만 20여개사에 이르는 등 미국, 일본 등 9개국에서 66개사에 이르러 국내환경시장이 외국에 종속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환경부문 해외공사 수주실적(91년 기준)은 7개업체가 6천7백만달러에 그쳐 해외시장 개척은 아직 초보단계에

**지금껏 경제논리에 밀려  
도외시돼온 환경은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생활욕구사회로 접어든  
국내에서도 주요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환경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적 실리획득은 물론  
환경보호를 강화해 국민과  
국토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머물러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GNP대비 환경투자액이 지난 85년 0.12%에서 91년 0.22%로 올랐으나 일본 0.34%, 미국 0.57% 등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사실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마련, 이 기간동안 약 8천억원을 투자, 대기, 수질 및 각종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것이 현 수준을 어느 정도 개선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산업 부문의 문제와 함께 기업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자세도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해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업

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1만1천여건이 적발 됐으나 당국의 눈을 피해 이뤄지고 있는 각종 오염행위는 더욱 많고 엄청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정부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융자해주는 환경오염방지 운영 기금이 올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1천6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업계 등의 요구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CFC사용물질의 규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각종 국제환경보호협약이 국내 업계의 행동반경을 줄이도록 하면서 일명「그린 라운드」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환경은 지난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현안으로 공식 대두됐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격한 환경파괴를 통해 이뤄진 경제적 부는 이제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해 투자돼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껏 경제논리에 밀려 도외시돼온 환경은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생활욕구사회로 접어든 국내에서도 주요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환경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적 실리획득은 물론 환경보호를 강화해 국민과 국토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